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2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1년 2월 광공업 생산은 의약품, 식료품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함.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보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3.0%), 기계장비(20.2%), 자동차(11.3%)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의약품(-11.3%), 식료품(-4.3%), 컴퓨터(-13.4%)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7.2%), 운수(4.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4.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5%)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20.2%), 전문·과학·기술(-7.5%), 하수·폐기물처리(-4.0%), 교육(-1.8%)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9.0%),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3%)는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9%)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의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크게 둔화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주거용) 및

토목공사(일반토목), 발주자별로는 공공 및 민간부문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3.2%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에서 사무실·점포,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는 관공서, 기계설치, 도로·교량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6.7%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로 전월보다 0.2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4%로 전월보다 0.6%p 하락함.

◆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여 3개월 연속 4%대 상승(생활물가지수 4.9% 상승)

○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부문, 기타부문(금반지 등)에서 각각 10.9%, 7.9%, 7.3%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 2008 | | | | | 2009 | | | | | 2010 | | | | | 2011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p | 연2p | 2월 | 2월p | |
| 생산 | 광공업 생산 | 10.6 | 8.9 | 5.6 | 11.3 | 3.0 | -15.7 | -6.1 | 4.3 | 16.2 | -0.8 | 25.8 | 19.5 | 10.9 | 11.7 | 16.2 | 18.3 | 9.1(-2.3) |
| | 제조업 생산 | 10.7 | 9.3 | 5.5 | -12.1 | 3.0 | -16.5 | -6.6 | 4.4 | 16.8 | -0.9 | 26.8 | 20.2 | 11.2 | 11.9 | 16.7 | 18.9 | 9.3(-4.3) |
| | 출하 | 8.9 | 6.6 | 5.3 | -10.1 | 2.4 | -14.9 | -5.8 | 2.1 | 12.8 | -1.7 | 21.8 | 17.2 | 9.9 | 11.9 | 14.4 | 13.3 | 10.3(-4.4) |
| | 내수 | 5.3 | 1.7 | 1.7 | -11.0 | -0.7 | -15.7 | -5.9 | 3.4 | 12.3 | -1.8 | 21.2 | 15.4 | 6.6 | 8.3 | 11.5 | 11.4 | 6.3(-12.4) |
| | 수출 | 14.3 | 14.3 | 10.3 | -8.8 | 7.1 | -13.8 | -5.7 | 0.4 | 13.3 | -1.7 | 22.5 | 19.7 | 14.5 | 16.9 | 18.2 | 16.0 | 15.7(-9.7) |
| 서비스업 생산 | 6.4 | 4.8 | 3.2 | -0.4 | 3.4 | -0.3 | 2.4 | 1.9 | 3.7 | 2.0 | 5.7 | 4.0 | 2.3 | 3.1 | 3.9 | 6.2 | 0.2(-3.4) | |
| 소비 | 소비재 판매 | 3.9 | 2.9 | 1.4 | -4.2 | 1.0 | -4.7 | 1.5 | 2.8 | 10.8 | 2.6 | 9.9 | 4.9 | 7.5 | 5.1 | 6.6 | 12.8 | -0.8(-6.1) |
| 투자 | 설비투자 | -0.9 | -2.7 | 5.3 | -13.4 | -4.3 | -17.9 | -12.9 | -9.9 | 10.2 | -8.2 | 25.5 | 24.5 | 29.3 | 13.5 | 25.1 | 23.7 | 1.6(-8.4) |
| 물가 | | 3.8 | 4.8 | 5.5 | 4.5 | 4.7 | 3.9 | 2.8 | 2.0 | 2.4 | 2.9 | 2.7 | 2.6 | 2.9 | 3.6 | 2.9 | 2.3 | 4.7(0.5)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3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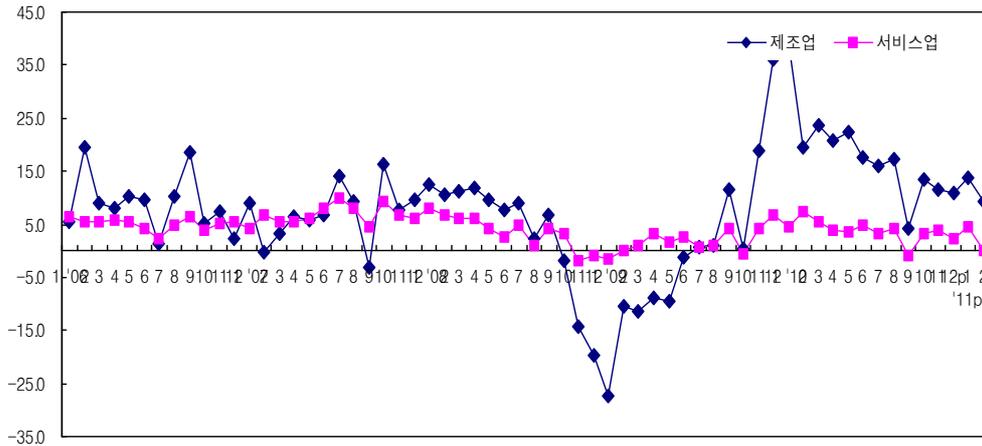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2011년 3월 생활물가지수는 123.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함.
- 2011년 3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19.0%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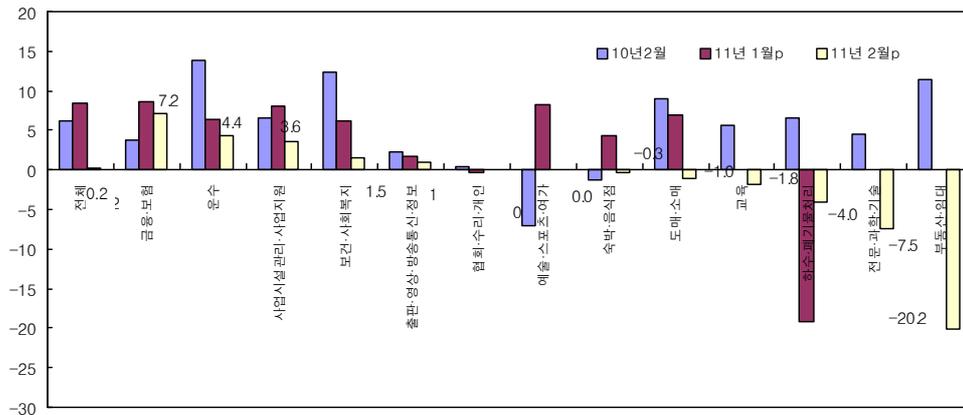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1.3), 『2011년 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4,48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2천 명(1.3%)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39천 명으로 197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049천 명으로 125천 명(1.3%) 증가
- 2011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2.2%)은 전년동분기대비 0.2%p, 여성(48.1%)은 전년동분기대비 0.0%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여성의 고용률은 46.1%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3,45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23천 명(1.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2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6천 명(2.0%)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63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6천 명(1.7%)이 증가함(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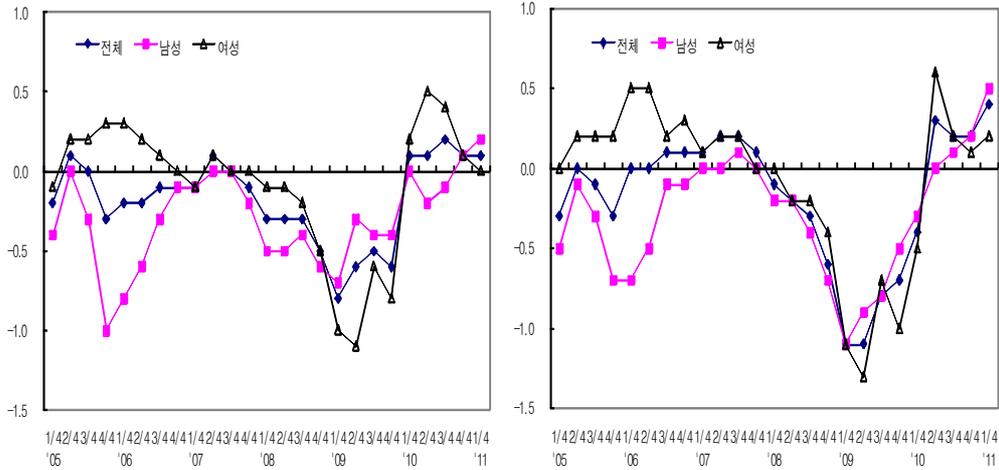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 2011 | | |
|---------|------------------|------------------|------------------|------------------|------------------|------------------|------------------|------------------|------------------|
|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월 | 3월 |
| 경제활동인구 | 24,448 (0.2) | 24,166 (1.5) | 24,382 (1.3) | 25,038 (1.5) | 24,993 (1.4) | 24,796 (1.4) | 24,488 (1.3) | 24,431 (1.6) | 24,918 (2.2) |
| 참가율 | 60.7 | 59.8 | 60.3 | 61.8 | 61.5 | 60.8 | 59.9 | 59.8 | 60.9 |
| 취업자 | 23,631 (0.0) | 23,037 (0.6) | 23,377 (1.2) | 24,170 (1.8)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336 (2.1) | 23,846 (2.0) |
| 고용률 | 58.7 | 57.0 | 57.8 | 59.6 | 59.3 | 58.9 | 57.4 | 57.1 | 58.3 |
| 실업자 | 817 | 1,130 | 1,005 | 868 | 873 | 808 | 1,028 | 1,095 | 1,073 |
| 실업률 | 3.3 | 4.7 | 4.1 | 3.5 | 3.5 | 3.3 | 4.2 | 4.5 | 4.3 |
| 비경제활동인구 | 15,829 (3.0) | 16,254 (1.0) | 16,073 (1.2) | 15,493 (1.0) | 15,656 (0.8) | 15,962 (0.3) | 16,392 (0.8) | 16,448 (0.4) | 15,999 (-0.5) |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4), 『2011년 3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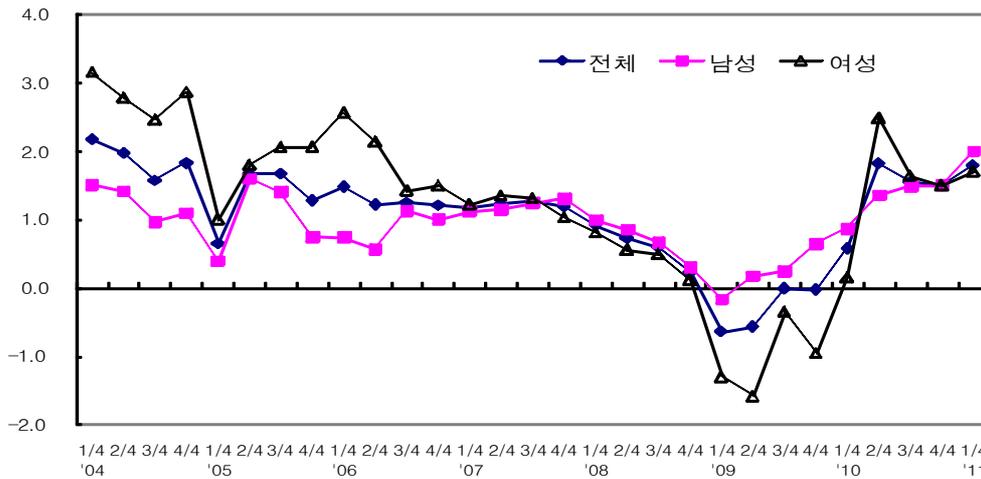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1,02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1천 명(-9.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감소
 - 남성 실업자는 61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0천 명(-10.1%), 여성 실업자는 41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천 명(-7.2%) 감소
 - 실업률은 남성이 4.3%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감소하였고, 여성은 4.1%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감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8천 명(0.8%)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5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7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3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1천 명(1.0%)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2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73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40천 명(16.0%)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56천 명으로 16천 명(-0.4%) 감소

◆ 제조업 증가 지속,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8천 명, 3.0%), 제조업(228천 명, 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46천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2010 | | | | 2011 | | | |
|-------------------|------------------|------------------|------------------|------------------|------------------|------------------|------------------|------------------|------------------|
|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월 | 3월 |
| 전 산업 | 23,631 (0.0) | 23,037 (0.6) | 23,377 (1.2) | 24,170 (1.8)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336 (2.1) | 23,846 (2.0) |
| 농림어업 | 1,579 (-6.9) | 1,235 (-11.7) | 1,385 (-12.0) | 1,733 (-4.6) | 1,754 (-2.5) | 1,544 (-2.2) | 1,207 (-2.3) | 1,146 (-4.2) | 1,456 (5.1) |
| 제조업 | 3,862 (-1.2) | 3,911 (1.6) | 3,924 (2.9) | 4,015 (4.5) | 4,053 (6.9) | 4,131 (7.0) | 4,139 (5.8) | 4,149 (6.7) | 4,122 (5.1) |
| 건설업 | 1,704 (-5.9) | 1,644 (-3.6) | 1,720 (-0.9) | 1,816 (2.5) | 1,791 (5.4) | 1,761 (3.3) | 1,641 (-0.2) | 1,622 (1.7) | 1,670 (-2.9) |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5,511 (-2.6) | 5,532 (-1.0) | 5,455 (-1.6) | 5,461 (-1.3) | 5,443 (-1.2) | 5,442 (-1.3) | 5,471 (-1.1) | 5,461 (-1.4) | 5,452 (0.0)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 8,149 (4.6) | 7,859 (3.2) | 8,043 (4.4) | 8,294 (3.9) | 8,244 (0.9) | 8,234 (1.0) | 8,097 (3.0) | 8,053 (3.3) | 8,238 (2.4) |
|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 2,802 (1.8) | 2,834 (4.1) | 2,829 (4.2) | 2,831 (2.4) | 2,816 (2.3) | 2,855 (1.9) | 2,880 (1.6) | 2,883 (1.8) | 2,884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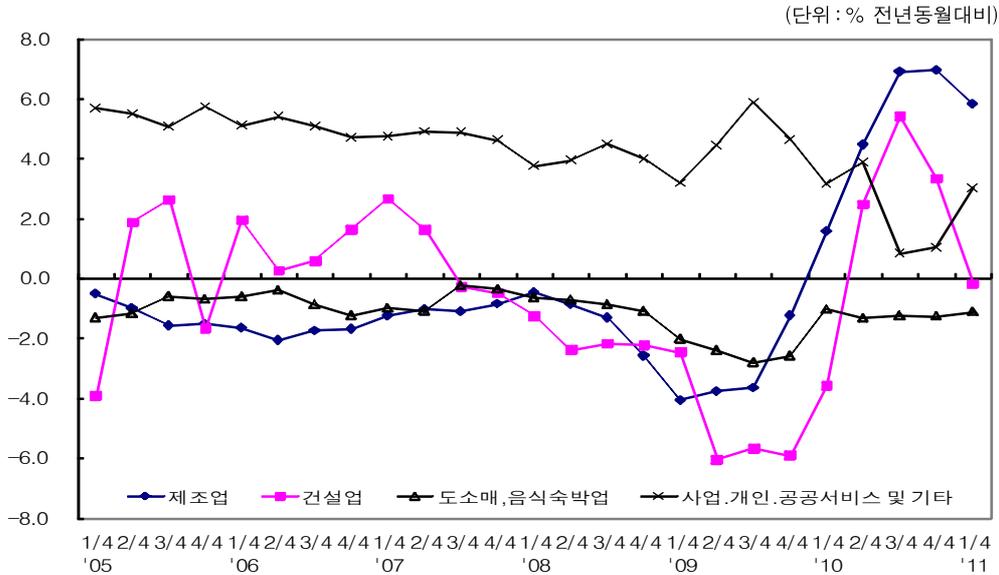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4), 『2011년 3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명, 1.6%)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3천 명, -0.2%), 농림어업(-28천 명, -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1천 명, -1.1%)에서는 감소

- 제조업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급격히 둔화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추세가 회복세를 보임(그림 5 참조).

◆ 비임금근로자 감소추세 지속, 일용근로자 소폭 증가

○ 2011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4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6천 명(-1.5%)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91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9천 명(3.2%)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413천 명으로 605천 명(6.2%)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04천 명으로 88천 명(-1.8%) 감소하였음.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1,701천 명으로 2천 명(0.1%) 증가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소폭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좌측 참조).
- 2010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는 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소폭 증가(그림 6 우측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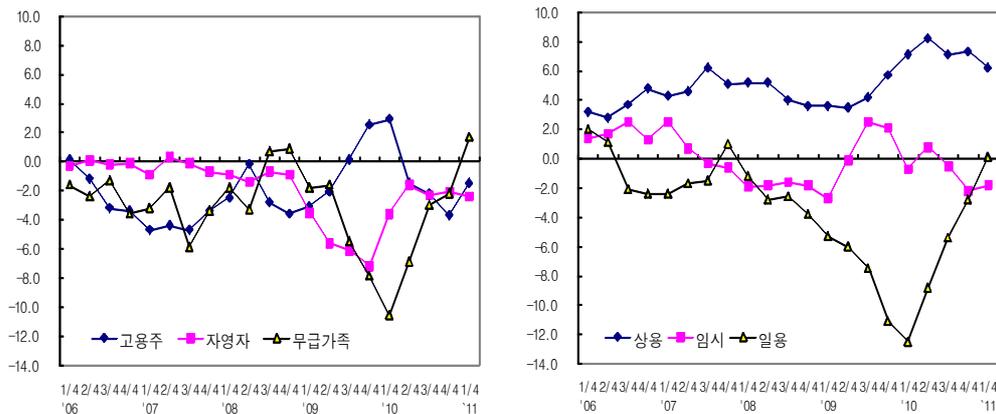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 2010 | | | | 2011 | | |
|---------|------------------|------------------|------------------|------------------|------------------|------------------|------------------|------------------|------------------|
|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월 | 3월 |
| 전 체 | 23,631 (0.0) | 23,037 (0.6) | 23,377 (1.2) | 24,170 (1.8) | 24,120 (1.6) | 23,989 (1.5) | 23,459 (1.8) | 23,336 (2.1) | 23,846 (2.0) |
| 비임금근로자 | 6,952 (-5.3) | 6,638 (-3.5) | 6,761 (-3.9) | 7,023 (-2.6) | 6,994 (-2.4) | 6,778 (-2.5) | 6,542 (-1.5) | 6,480 (-1.6) | 6,781 (0.3) |
| 자영업주 | 5,600 (-4.7) | 5,514 (-1.9) | 5,579 (-2.4) | 5,696 (-1.6) | 5,646 (-2.3) | 5,514 (-2.6) | 5,399 (-2.1) | 5,359 (-2.4) | 5,554 (-0.4) |
| 무급가족종사자 | 1,292 (-7.9) | 1,124 (-10.6) | 1,182 (-10.5) | 1,327 (-6.9) | 1,348 (-3.0) | 1,264 (-2.2) | 1,143 (1.7) | 1,122 (2.3) | 1,227 (3.8) |
| 임금근로자 | 16,678 (2.4) | 16,398 (2.3) | 16,617 (3.4) | 17,148 (3.8) | 17,126 (3.3) | 17,211 (3.2) | 16,917 (3.2) | 16,856 (3.5) | 17,065 (2.7) |
| 상용근로자 | 9,621 (5.7) | 9,808 (7.1) | 9,926 (8.2) | 10,060 (8.2) | 10,158 (7.1) | 10,320 (7.3) | 10,413 (6.2) | 10,390 (6.2) | 10,543 (6.2) |
| 임시근로자 | 5,167 (2.1) | 4,892 (-0.7) | 4,976 (0.7) | 5,179 (0.8) | 5,148 (-0.5) | 5,052 (-2.2) | 4,804 (-1.8) | 4,781 (-1.2) | 4,782 (-3.9) |
| 일용근로자 | 1,891 (-11.1) | 1,699 (-12.5) | 1,714 (-12.6) | 1,909 (-8.8) | 1,820 (-5.4) | 1,838 (-2.8) | 1,701 (0.1) | 1,684 (1.6) | 1,740 (1.5) |
| 36시간 미만 | 2,961 (4.5) | 4,851 (56.9) | 3,297 (11.6) | 3,197 (6.7) | 3,329 (-1.8) | 3,090 (4.4) | 3,246 (-33.1) | 3,227 (-59.9) | 3,236 (-1.9) |
| 36시간 이상 | 20,404 (-0.7) | 17,671 (-8.7) | 19,814 (-0.5) | 20,705 (1.1) | 20,362 (2.4) | 20,620 (1.1) | 19,739 (11.7) | 19,628 (38.5) | 20,323 (2.6) |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 4), 『2011년 3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4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05천 명(-33.1%)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739천 명으로 2,068천 명(11.7%) 증가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12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3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0천 명(-12.7%) 감소

◆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기대비 실업률 감소

- 2011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5%, -0.6%p), 40대(2.5%, -0.4%p), 50대(2.7%, -0.5%p), 60세 이상(4.5%, -1.3%p)에서 감소
 - 30대(4.0%, 0.1%p)에서만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4.1%, -1.0%p), 고졸(4.6%, -0.4%p), 대졸 이상(3.8%, -0.4%p) 모두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 2009 | | 2010 | | | | 2011 | | |
|-----------|--------------|----------------|----------------|--------------|--------------|--------------|----------------|----------------|----------------|
| | 4/4분기 | 1/4분기 | 3월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월 | 3월 |
| | | | | | | | | | |
| 전 체 | 817 (3.3) | 1,130 (4.7) | 1,005 (4.1) | 868 (3.5) | 873 (3.5) | 808 (3.3) | 1,028 (4.2) | 1,095 (4.5) | 1,073 (4.3) |
| 15~29세 | 320 (7.6) | 408 (9.5) | 379 (9.0) | 332 (7.7) | 323 (7.6) | 297 (7.1) | 372 (8.8) | 357 (8.5) | 397 (9.5) |
| 30~39세 | 202 (3.3) | 234 (3.9) | 229 (3.8) | 217 (3.6) | 213 (3.5) | 194 (3.2) | 237 (4.0) | 250 (4.2) | 247 (4.1) |
| 40~49세 | 151 (2.3) | 192 (2.9) | 191 (2.8) | 154 (2.3) | 165 (2.5) | 151 (2.2) | 167 (2.5) | 183 (2.7) | 176 (2.6) |
| 50~59세 | 104 (2.2) | 150 (3.2) | 126 (2.6) | 105 (2.1) | 113 (2.3) | 114 (2.3) | 133 (2.7) | 137 (2.8) | 142 (2.8) |
| 60세 이상 | 41 (1.5) | 146 (5.8) | 80 (3.0) | 61 (2.1) | 59 (2.0) | 53 (1.9) | 119 (4.5) | 168 (6.5) | 110 (3.9) |
| 중졸 이하 | 119 (2.3) | 241 (5.1) | 162 (3.3) | 131 (2.5) | 131 (2.5) | 112 (2.2) | 195 (4.1) | 236 (5.1) | 174 (3.5) |
| 고 졸 | 393 (4.0) | 493 (5.0) | 450 (4.6) | 386 (3.8) | 408 (4.0) | 392 (3.9) | 465 (4.6) | 473 (4.7) | 480 (4.8) |
| 대졸 이상 | 306 (3.2) | 396 (4.2) | 393 (4.1) | 352 (3.6) | 334 (3.5) | 304 (3.1) | 369 (3.8) | 386 (3.9) | 419 (4.2) |
| 취업무경험 실업자 | 36 | 57 | 43 | 46 | 35 | 38 | 52 | 45 | 56 |
| 취업유경험 실업자 | 781 | 1,072 | 962 | 823 | 838 | 770 | 977 | 1050 | 1,016 |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1. 4), 『2011년 3월 고용동향』.

- 2011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1,09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7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95천 명 감소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0년 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0년 연간 전국가구의 소득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5.0%) 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소득(7.7%) 및 이전소득(9.8%)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8% 증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 | 2009 | | | | 2010 | | | | | |
|---------|---------|-------|---------|-------|---------|-------|---------|-------|---------|-------|
| | 4/4분기 | | 연간 | | 3/4분기 | | 4/4분기 | | 연간 | |
| | 금액 | 증감률 |
| 소득 | 3,535.9 | 4.9 | 3,432.0 | 1.2 | 3,660.2 | 6.1 | 3,620.4 | 2.4 | 3,631.7 | 5.8 |
| 경상소득 | 3,389.1 | 4.5 | 3,293.9 | 1.2 | 3,559.2 | 6.3 | 3,498.7 | 3.2 | 3,491.1 | 6.0 |
| 근로소득 | 2,289.3 | 3.7 | 2,237.4 | 1.3 | 2,423.8 | 6.6 | 2,351.5 | 2.7 | 2,348.6 | 5.0 |
| 사업소득 | 798.4 | 9.9 | 747.2 | 1.5 | 807.2 | 5.9 | 818.0 | 2.5 | 804.8 | 7.7 |
| 재산소득 | 11.5 | -28.9 | 14.8 | -18.2 | 12.3 | -14.7 | 15.4 | 34.6 | 14.5 | -2.2 |
| 이전소득 | 289.9 | -1.3 | 294.5 | 1.3 | 316.0 | 6.7 | 313.8 | 8.3 | 323.3 | 9.8 |
| 비경상소득 | 146.8 | 15.5 | 138.1 | 1.1 | 101.1 | -1.2 | 121.6 | -17.2 | 140.6 | 1.8 |
| 소비지출 | 2,215.9 | 7.4 | 2,149.2 | 1.7 | 2,308.8 | 5.4 | 2,308.4 | 4.2 | 2,286.9 | 6.4 |
| 처분가능소득 | 2,890.5 | 4.5 | 2,805.6 | 0.7 | 2,965.6 | 4.8 | 2,966.4 | 2.6 | 2,957.7 | 5.4 |
| 흑자액 | 674.6 | -4.0 | 656.5 | -2.4 | 656.8 | 2.7 | 658.0 | -2.5 | 670.8 | 2.2 |
| 흑자율 | 23.3 | -2.1p | 23.4 | -0.7p | 22.1 | -0.5p | 22.2 | -1.2p | 22.7 | -0.7p |
| 평균 소비성향 | 76.7 | 2.1p | 76.6 | 0.7p | 77.9 | 0.5p | 77.8 | 1.2p | 77.3 | 0.7p |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1.2), 『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재산소득은 2.2%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5%), 오락·문화(12.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음(실질로는 3.9%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과 사적비소비지출(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이 모두 증가해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음.
- 2010년 연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음.

○ 2010년 4/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비경상소득(17.2%)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고(실질 2.8% 증가), 소비지출은 의류신발(13.1%), 오락·문화(15.6%) 지출증가에 기인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음(실질 1.3% 증가).

〈표 7〉 소득분배 동향

(단위 : 배, %, %p)

|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p |
|--------------------------|-------------|-------|-------|-------|-------|-------|-------|-------|-------|-------|
| 전국가구 (1인 이상 농가 포함) | 지니계수 | 시장소득 | - | - | - | 0.330 | 0.340 | 0.344 | 0.345 | 0.341 |
| | | 가처분소득 | - | - | - | 0.306 | 0.312 | 0.314 | 0.314 | 0.310 |
| | | 개선효과 | - | - | - | 0.024 | 0.028 | 0.030 | 0.031 | 0.031 |
| | 소득5분위 배율 | 시장소득 | - | - | - | 6.65 | 7.09 | 7.38 | 7.70 | 7.74 |
| | | 가처분소득 | - | - | - | 5.38 | 5.60 | 5.71 | 5.75 | 5.66 |
| | | 개선효과 | - | - | - | 1.27 | 1.49 | 1.67 | 1.95 | 2.08 |
| | 상대빈곤율 | 시장소득 | - | - | - | 16.6 | 17.3 | 17.5 | 18.1 | 18.0 |
| | | 가처분소득 | - | - | - | 14.3 | 14.8 | 15.2 | 15.3 | 14.9 |
| | | 개선효과 | - | - | - | 2.3 | 2.5 | 2.3 | 2.8 | 3.1 |
| 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 지니계수 | 시장소득 | 0.292 | 0.301 | 0.306 | 0.312 | 0.321 | 0.323 | 0.320 | 0.314 |
| | | 가처분소득 | 0.277 | 0.283 | 0.287 | 0.291 | 0.295 | 0.296 | 0.294 | 0.288 |
| | | 개선효과 | 0.015 | 0.018 | 0.019 | 0.021 | 0.026 | 0.027 | 0.026 | 0.026 |
| | 소득5분위 배율 | 시장소득 | 5.00 | 5.27 | 5.53 | 5.74 | 6.05 | 6.16 | 6.14 | 6.03 |
| | | 가처분소득 | 4.43 | 4.61 | 4.75 | 4.83 | 4.95 | 4.98 | 4.95 | 4.81 |
| | | 개선효과 | 0.57 | 0.66 | 0.78 | 0.91 | 1.10 | 1.18 | 1.19 | 1.22 |
| | 상대빈곤율 | 시장소득 | 13.1 | 13.8 | 14.7 | 14.8 | 15.5 | 15.0 | 15.4 | 14.9 |
| | | 가처분소득 | 11.4 | 12.1 | 12.9 | 12.6 | 12.9 | 12.9 | 13.0 | 12.5 |
| | | 개선효과 | 1.7 | 1.7 | 1.8 | 2.2 | 2.6 | 2.1 | 2.4 | 2.4 |

주 :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기준
 2)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5분위) / 하위 20%의 소득(1분위)
 3)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4) 2010년 자료는 잠정치임(농가자료는 가집계 상태임).

- 2010년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0으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0.288로 2009년 0.294보다 다소 낮아짐.
- 2010년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7.74배로 2009년 7.70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은 5.66배로 2009년 (5.75배)에 비해 감소하였음.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0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4월 21일 기준)는 114,661일로 집계됨.

〈표 8〉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 | 2011. 1. 1~2011. 4. 21 | 전년동기 | 증 감(%) |
|-----------|------------------------|--------|-------------|
| 노사분규 발생건수 | 7 | 8 | - |
| 종 결 | 6 | 5 | - |
| 진 행 | 1(8) | 3(3) | ()는 전년도 이월 |
| 근로손실일수 | 114,661 | 79,302 | 33.8 |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4월 21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KEC

- KEC는 작년 전임자 수와 관련된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조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노사관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바 있으며, 현재 10개월째 사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지난 달 사용자는 조합원 88명에 대해 약 30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4월 1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노사 양측에 ‘회사 정상화 및 징계, 민·형사 최소화 이행촉구’를 골자로 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 화해(안)를 발송한 바 있음.
- 이에 노조는 구미지청의 권고 화해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임.

구미고용노동지청이 발송한 권고 화해(안)는 해고 35명 중 파업 주동자 19명은 정당해고, 나머지 16명은 구제, 손해배상소송 유보, 고소·고발 쌍방 화해 등이 주된 내용임.

- 4월 들어 KEC 노사는 4월부터 ‘2010년 임단협’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상호 합의함. 사측은 금속노조의 ‘2011년 구미지부 집단교섭(4.28)’ 및 KEC 지회의 ‘2010년·2011년 임단협 교섭(4.15)’ 요구에 대해 실무교섭을 요구한 상태임.

■ 한진중공업

- 노조 지회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과 고공농성을 계속중임. 사측도 2월 14일부터 직장폐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4월 14일 이후로는 노사간 교섭이 중단된 상태. 현재 영도 조선소 생산지원동에 상주하고 있는 조합원은 300여명 정도로 추정됨.
- 사측은 비해고대상자 627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 현재까지 연수교육을 실시중임(‘회사정상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 노조 지회의 조합원 916명(4월 현재, 해고자 170명 포함) 중 이 중 자택대기(39명), 조합원인 정상근무자(32명)를 제외한 약 80%가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함. 경제일간지, 경총 등은 파업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 조합원들이 이탈한 결과라고 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
- 한편, 3월 민주당 국회의원(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홍희덕)들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이후, 4월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한나라당 부산시당 기자실에서 부지회장 등 노조간부 4명 면담을 한 바 있음.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2차 파업중단 이후 현장복귀 결정에 따라 사업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징계조치를 단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노조 지회들은 4월에도 여전히 산발적인 농성을 전개중에 있음.
- 사측(아산공장 하청업체)은 지난 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1차로 총 258명(해고 13명, 정직 105명, 감봉 123명, 견책 17명)을 징계함. 이후 1차 징계

- 에 반발한 작업거부자 중 80명(해고 25명, 정직 55명)을 2차 징계한 바 있음.
- 이에 아산지회는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월 22일부터 4월 현재까지 온양 온천역 광장 천막에서 10여명이 노숙농성 계속중임. 4월 20일 경, 아산공장 하청 업체는 정직 1개월 후 복직한 조합원 26명 중 무단결근(4일간) 및 무단이탈(6일간) 한 조합원 2명에 대하여 징계하고 통보함.
 - 한편, 울산지회는 임원선거 후보자(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 등록절차를 진행중이었으나(4.7~4.15), 후보등록자가 없어 선거일정을 2주간 연장한 상태임. 울산지회는 조합비 유용문제로 1월 수석부지회장이 사퇴하면서 2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 사퇴로 내홍을 겪은 바 있음.
- 전북지역 시내버스노조(민주노총 소속 7개 지회)
- 3월에는 전북지역 시내버스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전북 지역구 출신인 민주당 소속의 정동영·신건·장세환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 개최. 4월에 들어서도 해결 국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93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고공농성(지회장 3명), 거리행진 등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섭은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최근 4월 15일에는 노조가 항의방문차 전주고용지청을 방문하였고, 근로개선지도과장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뚜렷한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임. 4월 중순 경,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있으나 6개 버스회사들이 이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단체교섭 성사부터가 어려운 상황임. 버스회사들은 파업중단 및 선 복귀 후 교섭 등을 교섭불참 이유로 내걸고 있기 때문임.
 - 지난 4월 26일, 파업 140일만에 노사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러 전주시청에서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4월 27일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예정임.

【잠정합의 주요내용】

- ① 노조 업무공간, 노조비공제, 전임자 문제는 업무복귀 후 논의
- ② 노조가입 이후 합의시까지의 징계 철회 및 민형사상 소송 취하(이후 발생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짐)
* 노조가입 후 파업 돌입까지 관련된 징계대상자 21명
- ③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조건·근로조건·복리후생조건은 전북지역자동차노조(한국노총) 단협 준용
- ④ 본 합의로 노조는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하며, 사측은 본 합의이행을 위해 월 3회 각사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성실히 진행

- 공공서비스노조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분회
 - 공공서비스노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분회는 노사간 잠정합의가 최종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분규상황은 종료됨. 연세대 분회는 노사 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4월 7일 잠정합의에 도달함.
 - 이들 3개 분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고려대 분회는 4월 16일 ‘임금 잠정합의안 및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 미지급’ 안전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0.3%로 찬성 가결함. 연세대 분회와 이화여대 분회는 4월 1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조합원에 대한 보고내용 등 투표대상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
 - 4월 20일, 연세대·이화여대 분회는 201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각 가결 발표(연세대 94.9%, 이화여대 85.4% 찬성).

〈표 9〉 3개 분회 잠정합의안

| | |
|---------|--|
| 고려대 분회 | - 4.1 고려대 분회(안암지회 제외) 노사는 시급 인상 및 쟁의기간 임금지급 등에 잠정합의한 바 있음. ※ 3.19 고려대 분회, 안암지회와 동일한 단협 잠정합의서 체결(임금과 보충협약 미체결) - 임금: 미화원 시급 4,600원, 식대 월 5천 원 인상(월 6만 원) - 단협: 용역계약 만료시 1년 미만 퇴직근로자 위로금 지급, 휴업보상·요양보상 산재보험법 외 평균임금 30% 지급,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 60일분 추가 지급 |
| 이화여대 분회 | - 3월 25일 이화여대 분회는 잠정합의에 이룸. - 임금: 미화원 시급 4,600원(경비 3,680원), 식대 월 1만 원 인상(미화 월 5만 원, 경비 월 6만 원) - 단협: 용역계약 만료시 1년 미만 퇴직근로자 위로금 지급, 휴업보상·요양보상 산재보험법 외 평균임금 30% 지급,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 60일분 추가 지급, 근로시간면제자 2명(한도준수), 노조에 복지기금 월 90만 원 지급 |
| 연세대 분회 | - 4월 7일 연세대 분회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 후 4월 8일 전원복귀 - 임금: 미화직 시급 4,600원, 보안직 시급 3,680원(4,600원의 80%), 식대보조 월 6만 원, 남성미화 업무수당 5만 원 등 - 단협: 용역계약 만료 및 해지시 1년 미만 월수에 대해서도 퇴직금 월할 계산하여 지급, 산재보험법상 보상 이외에 평균임금 30% 추가지급,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 60일분 추가 지급, 근로시간면제자 3명 |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대우자동차판매
 - 2010년 11월, 대우자동차판매와 영안모자(대우버스 최대주주)는 회사분할을 통해 대우자동차판매 신설법인 인수를 시작함.

- 같은 해 12월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572명 중 388명)을 관할 고용청에 제출한 후, 2011년 1월 31일자로 정리해고대상자 229명(조합원 168명)에 대해 1월 31일자로 해고 통보. 지난 달,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이런 상황에서 4월에는 대우자동차판매는 개인 사채권자의 분할 반대로 주주총회를 거쳤음에도 회사분할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짐.
- 노조는 4월 초까지 회사에서 점거농성중임.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분할등기 이후 영안모자를 상대로 고용승계 요구를, 한국GM을 상대로 정리해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 1월 초 100여명의 농성자가 4월 현재 20여명 단위로 축소되었음.

■ 에스지신용정보

- 2004년 설립된 기업으로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되어 있음. 4월 현재 노사간 쟁점은 채권추심원 140여명(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이 주된 쟁점임.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그 외 근로시간면제, 사내복지기금 등도 쟁점사안임. 노조는 완전전임 1명, 부분전임 5명(3,000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분전임만 6명(2,000시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함. 적용되는 고시한도는 3,000시간임.
- 4월 현재 노조는 부분파업을 전개하다 출근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전환함. 이후 부분·전일파업을 예정하고 있음. 파업 참가자는 19~65명에 이룸.

■ 화성교통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임.
- 노조는 4월, ‘파업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22명 중 전원이 찬성하여 상급단체를 변경함.
- 4월까지 노조는 유니언숍 유지·1인1차제 도입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조합원 22명 참여).

■ YTN

- 4월 15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제기한 ‘징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서울고법 판결: 징계 해고자 6명 중 3명(노종면, 현덕수, 조승호)에 대해서는 징계 정당성 인정. 그 외 3명(우장균, 권석재, 정유신)은 해고무효(징계양정 과다)로 판결. 정직(6명)·감봉(8명) 징계자 14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함.

- 2008년 7월 구본홍 전 사장이 선임되면서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 사측은 사장선임 반대 투쟁을 주도한 조합원 33명 징계를 결정함. 2008년 10월부터 징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6명에 대한 해고무효가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징계 정당성을 인정

■ 현대자동차

- 4월 초, 현대자동차가 현재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을 무급휴직 발령함. 4월부터 타임오프 적용사업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이 기존 전임자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고시한도에 따른 전임자 24명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임.1)
- 4월부터 타임오프 관련 노사간 특별협의를 진행함. 최근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 외 인원의 조합활동 참여 및 협의시간 인정(안)’ 제시. 그러나 노조는 사측안 중 대의원의 일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 제기. 사측은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전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불가 입장

사측안: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외 인원의 조합활동 참여 및 협의시간과 관련 아래와 같이 인정함.

1. 대의원 활동 관련

① 확대운영위(지역위원회 운영위 포함), 지부 및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연 1회 지부 및 지역위원회 대의원 수련회 인정

② 협의 관련: 노사공동위·생산협의·사업부 노사협의·판매정비 산하지회 노사협의·부서 노사협의 등의 자체 회의시간은 ‘회의 안건 관련성’을 고려하여 인정

■ 금융노조·금속노조

- 지난 달 31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에 ‘산별중앙교섭요구(안)’을 제시하였음. 4월부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노조에 상견례 연기 및 교섭내용 변경 요청. 협의회는 사측 교섭임원의 임기가 올해 5월 30일자로 종료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지부보충교섭을 진행중에 있어 5월 중순 이후로 교섭을 개시하자는 입장임.
-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는 4월 19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 매주 화요일 교섭을 실시할 계획임. 노조는 6월 8일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임(6월 13~1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1) 고시한도에 따르면 완전전임은 24명, 부분전임의 형태는 48명까지 가능함.

- 금융노조 산별 중앙교섭 주요 요구안
 - 총액임금 8.0%+@ 인상,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및 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구조조정 수단 부서 운영금지, 전임자 처우 등 노사자율 결정 등임.
-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 주요 요구안
 -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15만 원 인상, 7월 1일 이후 금속노조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을 요구

◆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는 친노동자 정당 후보” 지지
 - 한국노총은 지난 달 이후로도 개정노조법(타임오프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4월 13일,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찬성하는 친노동자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 특히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지지의 폭을 광범위하게 하여 선거투표를 제고, 선거운동 지원을 계획
 - 특히 한국노총은 분당(을)과 김해(을),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노조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야3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함.
- 민주노총, “5대 노동현안 조사 거부, 한나라당 환노위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 4월 14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5대 노동현안 조사 거부, 한나라당 환노위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짐. 노사관계 최대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 진상조사단 구성과 산재소위원회 구성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
 -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사과와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함.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4월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한 상태임.
- 민주노총, “적정 노동강도 산정기준 지침” 발간 추진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내 최초로 적정 노동강도 산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함. 금속노조는 4월 말까지 ‘맨아워2) 산정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함.
 - 금속노조는 이 지침을 발간하기 위해 맨아워 학문 전공 공학자, 사회학 전문가,

2) 맨아워(M/H)란 노동자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분량을 뜻함.

국의 작업현장 실사 및 교섭체계 분석가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참여시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의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함.

- 이 지침은 작업장의 작업조직과 그에 따른 근무형태, 임금 및 고용까지 포괄하면서 노조와 지부, 노조 간부들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함. 주요 언론들도 이 지침서 발간 이후 현장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경영계 동향

○ 경총, 야당 노조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지난 3월 31일,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양대 노총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발표함.
- 경총은 ‘상당부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 시도를 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야당들의 노동법 재개정을 두고 ‘무책임한 시도’라고 논평
- 더구나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완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흔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힘.

○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4월 13일,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조사결과 발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운데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하여 60.2%의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밝혔고, ‘작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하다고 함.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관련 주요 고용정책들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활용가능성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여성고용 기피현상’과 ‘인건비 증가’임.
-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은 인력 및 경영사정의 한계로 인한 ‘여성고용 기피현상’을 가장 우려함. 이들 제도가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여성고용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기업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법제화’제도 추진에 대해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1.8일(유급 1.0일),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5일, 중소기업은 1.5일인 것으로 조사됨. 기업들의

69.4%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및 유급화(3일)’에 대하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보상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전망함.

◆ 정부, 국회 동향

○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사업장 1분기 임금인상률, 노사분규건수 발표

- 4월, 고용노동부는 지난 1분기 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 8천 458곳 가운데 임금교섭을 타결한 572곳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6%, 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과 타결률은 4.7%와 6.9%였으며, 공공부문은 2.7%와 4%로 나타났다고 발표

| 사업장수 | 타결사업장수 | 타결률 | 협약임금 인상률 |
|---------------|-----------|-----------|-----------|
| 8,458 (7,816) | 572 (656) | 6.8 (8.4) | 4.6 (4.5) |

- 임금인상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함.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완료사업장 비율)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포인트 낮게 나타남. 고용노동부는 4월 이후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면 작년처럼 타결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³⁾
- 1분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투쟁을 벌이는 총연맹과 달리 기업단위 노사관계는 안정 기조를 보인다고 진단함.⁴⁾ 다만 2분기 이후에는 복수노조 허용, 사내하청, 취약근로자의 고용불안·처우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

-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함.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 노총이 보이콧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위원장 선임이 되지 못한 상황임.
-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위원장 후보(성신여대 박준성 교수)를 사실상 내정하고, 사전에 공표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는 이유임. 또한 사용자 편향성을 지

3) 지난해 타결률 추이를 보면, 4월 말 10.9%에서 5월 말 12.8%, 6월 말 16.6%, 7월 말 22.5%로 높아짐.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유가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가 더해져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3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제 물가상승률은 4.7%로, 정부 목표 3.0%보다 높은 상황임.

4) 1분기 노사관계 상황을 나타내는 노사분규건수는 8건으로 작년보다 25% 감소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도 86.1%에 달해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진단.

적하며 위원장 선임을 거부한 상태임.

- 이 배경에는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최저임금 현실화’를 올해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2011년 2월 양대 노총 모두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에 동참하여 상반기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5)

○ 고용노동부, ‘외국의 사내하도급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공개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커 해외 실태를 조사함.
-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의 임금차별을 최소화하고 있고, 파견직을 정규직화하거나 간접고용을 최소화한 사례 등을 담고 있음.

○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가칭)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이 공개됨.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중단이나 업체 폐업 등을 이유로 실업상태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노조활동이나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임.6)

사내 하도급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또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내 하도급업체는 그 근로자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국회 환노위, 노사관계 현안 문제 놓고 파행

- 4월 들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5대 노사관계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

- 5) 지난 3월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안을 2011년 시급 대비 25.2% 인상을 요구(평균임금은 전년대비 24% 인상요구). 한국노총도 전체 근로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25만 원의 50% 수준인 113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구.
- 6)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4월 18일자로 노사정위의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금속노조는 2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발표된 ‘(가칭)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고용노동부도 2011. 3. 23 ILO 310차 이사회의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요구를 함 (결의안에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복직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

음. 4월 13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상청의 현안보고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에 반발하면서 4월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함.
- 야당들이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한 배경에는 하루 전인 4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청문회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KL**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